

한겨레 21

국정원 규탄 시국촛불집회 <한겨레21> 특별판

나는 고발한다 국정원을

<한겨레21> · 시민고발단 10인의 시민고발장

시민고발장

- 고발인**
1. 김형래(서울대 총학생회장)
 2. 임재성(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생)
 3. 이도흠(한양대 교수·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4. 노중기(한신대 교수·교수노조 한신대지회장)
 5. 김용태(교사·전교조 광주지부장)
 6. 고승석(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
 7. 퇴휴(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대표)
 8. 권오광(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
 9. 최현국(목사·예수살기 총무)
 10. 정상덕(원불교 사회개혁 교무단 교무)
 4. 서상기(새누리당 국회의원)
 5. 남재준(현 국가정보원장)
 6. 국가정보원 소속 성명 불상의 자
 7. 원세훈(전 국가정보원장)
 8. 이종명(전 국가정보원 3차장)
 9. 민병주(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
 10. 김○○(당시 심리정보국 직원)
 11. 이□□(당시 심리정보국 직원)
 12. 이△△(외부 조력자)
 13. 김용판(전 서울지방경찰청장)
 14. 최현락(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현 경찰청 수사국장)
 15. 이병하(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장·현 여주경찰서장)
 16. 김○○(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17. 장○○(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피고발인**
1. 정문헌(새누리당 국회의원)
 2. 권영세(주중 대사)
 3. 김무성(새누리당 국회의원)

고발 취지

고발인들은 1) 피고발인 1 내지 3 및 6은 국가정보원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위반 2) 피고발인 4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3) 피고발인 5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4) 피고발인 7 내지 12는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5) 피고발인 13 내지 17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각 혐의로 고발하오니 이를 엄히 수사하여 각 처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발 이유

1. 고발의 배경

이미 국가정보원 등의 정치 개입과 대선 개입에 대하여 많은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피고발인 7 원세훈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고발인 13 김용판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던 국정원 직원 중인 피고발인 8 내지 12, 실제로 수사 결과를 축소·왜곡하였던 피고발인 14 내지 17은 모두 상관의 명령에 따라 행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되거나 아예 수사 대상에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불복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권력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가 상관의 명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반대 없이 학살을 수행한 영혼 없는 공무원의 행위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듯이, 공무원들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것은 엄청난 비극으로 귀결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불기소처분 등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된 자들은 반드시 기소되어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후 많은 국민이 공분하자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국익을 위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는 등 국정원은 여전히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국정원이 이미 오래전부터 위 대화록을 새누리당 소속 일부 정치인들과 공유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고,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이용하였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단순히 국정원이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을 이용하여 정치나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범위를 넘어서서 국정원과 그 배후에 대하여 훨씬 폭넓은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따라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관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시민들이 직접 시민고발장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II. 국정원의 정치 관여 및 대선 개입 관련 부분

1. NLL 관련 대화록 누설을 통한 정치 개입 및 대선 개입 부분

현재 국정원은 자신이 두 정상의 대화를 문서화하였기에 이 사건 대화록은 자신이 보관 및 관리하는 공공기록물(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의 내용을 생산한 것은 다른 아닌 두 정상이고 국정원은 단지 기술적으로 이 내용을 옮긴 것에 불과하기에 이 사건 대화록은 대통령 기록물(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혹은 그 보좌기관 등이 생산·접수·보유한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대통령 기록물은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의 사항으로서 공개시 중대한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정보)가 담겨 있는 경우 비공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대통령 기록물에 접근·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게 됩니다(동법 제19조 및 제30조).

피고발인 1은 2012. 10. 8.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두 정상의 대화록(이하 이 사건 대화록)에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발인 2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 종합상황실장으로 있으면서 2012. 12. 10. 지인들과 만나 이 사건 대화록의 내용을 언급하며 새누리당이 집권하게 되면 이 사건 대화록을 공개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발인 3은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으로 있으면서 2012. 12. 14. 부산 유세 현장에서 대화록의 일부를 그대로 읽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고발인 1 내지 3은 지난 대선 당시 이미 피고발인 6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대화록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 그 내용을 누설하였기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국정원 소속 피고발인 6과 공모하여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이기에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한편 지난 6.20. 피고발인 4는 피고발인 5 남재준과 공모하여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대화록을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 사건 대화록의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게 하였습니다. 이는 이 사건 대화록의 내용을 누설한 것이기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발인 5는 지난 6.24.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기록물공개심

의회를 열어 이 사건 대화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국회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이 사건 대화록 전문 및 8쪽짜리 발췌록을 전달 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대화록의 내용을 누설한 것이자, 이를 통하여 현재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새누리당 및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고 정치 개입을 한 것입니다. 특히 먼저 공개한 발췌록의 경우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부합하도록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는'이라고 본인을 표현한 부분이 '저는'으로, '위원장께서'라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칭한 부분이 '위원장님께서'라고 되어 있는 등 전체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를 낮추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조작되어 있어 정치 개입 의사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 심리전단을 통한 정치 관여 및 대선 개입 부분

피고발인 7 원세훈은 촛불집회가 벌어진 2008. 2.부터 2009. 1.까지 경찰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내면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조기에 제압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발인 7은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는 2009. 2. 제30대 국정원장에 취임한 이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을 제압하는 것을 국정원의 핵심 목표로 삼고,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대북 심리전을 해오던 국정원 3차장 산하의 심리전단에 주목하여 2009. 3. 국 소속 심리전단을 3차장 산하의 독립 부서로 편제하고, 2012. 2. 다시 사이버팀을 4개 팀 70여 명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발인 7은 피고발인 1~3차장→심리전단장→각 팀장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에 따라 사이버팀 요원들에게 주요 이슈와 논지를 하달하여 사이버팀 요원들이 활동하게 하였습니다.

피고발인 7은 매일 전 부서장 회의에서 각종 지시사항을 하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시사항은 회의 직후 각 실·국장 산하 팀장회의, 각 팀장 산하 직원회의 등을 통하여 전 직원에게 즉시 전파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으로 게시되어 전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발인 7은 매일 아침 본부 차장, 실·국장 내지 기획관이 참석하는 모닝브리핑에서 부서별로 자신의 지시에 대한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추가 지시 등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발인 7은 세종시, 4대강 사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 해군기지, 주택정책, 복지 등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하여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한편, 이에 반대하는 야당 등에 적극 대응하고 대통령의 외교 실적, 경제 성과 등을 널리 홍보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발인 7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이 선거와 관련하여 정부 정책 반대 활동을 강화하고 제도권 정치로의 진입을 통하여

정부에 대한 비판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막는다는 목적하에 이들 세력의 선거 공간 개입, 제도권 진입 시도를 적극 차단하고 확실히 대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피고발인 7의 지시는 순차적으로 피고발인 8 및 9를 통하여 피고발인 10 및 11에게 하달되었고, 피고발인 10 및 11은 피고발인 12와 함께 조직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선 2010. 4.3.부터 2012. 12.18.까지 1711회(선거 관여로도 판단되는 1281회 포함)에 걸쳐 '오늘의 유머'를 비롯한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게시글에 대하여 '찬성' 내지 '추천' 또는 '반대를 클릭하였습니다. 또한 2011. 12.22.부터 2012. 12.18.까지 1281회에 걸쳐 '오늘의 유머'를 비롯한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에 '찬성' 내지 '추천' 또는 '반대'를 클릭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피고발인 10, 11 및 12 등이 합계 1970회 불법 정치 관련 글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글 등을 73회 작성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모두 국정원법 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III. 경찰의 수사 결과 왜곡을 통한 대선 개입 관련 부분

피고발인 13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서, 2012. 12.11.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발생하자 사건에 대한 수사는 서울수서경찰서가 담당하되 디지털증거분석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이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시는 긴박한 선거 정국하에서 경찰의 진상 확인 결과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책임자인 피고발인 13로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증거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할 수사관서인 서울수서경찰서에 즉시 넘겨주어 인터넷 검색 및 IP 추적 등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발인 13은 2012. 12.15. 오전 피고발인 14 및 15로부터 "국정원 직원 김○○(피고발인 4)로부터 입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과 인터넷 검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위 하드디스크로부터 복구된 메모장 문서 파일에서 김○○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아이디와 닉네임 수십 개, 김○○이 주로 들어간 인터넷 사이트 이름, 우수 게시글 만드는 방법과 밀어내는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오늘의 유머' 등 정치적 이슈가 논의되는 인터넷 사이트 접속 기록이 수만 건 확인되며 메모장에서 나온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검색을 하여 이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작성한 글을 확인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피고발인 13은 위와 같은 보고를 받고, 이러한 분석 결과물을 서울수서경찰서에 그대로

넘겨주면 바로 수사하여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날 것이고, 이것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감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발인 13은 피고발인 14 내지 17과 함께 회의를 하여 하드디스크에 김○○ 본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작성·게재한 문재인·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의 전자기적 잔상이 남아 있지 않은 것에 착안하여 위와 같은 분석보고를 모두 은폐하여 서울수서경찰서에 보내지 않은 채 서울수서경찰서로 하여금 '하드디스크 저장 정보를 수십 개의 키워드로 검색하였으나 2012. 10.1. 이후 문재인·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왜곡된 발표를 사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피고발인 13의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2012. 12.16. 23시경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미 확인한 ID·게시물 등 분석결과물을 수사와 공보를 담당하는 서울수서경찰서에 제공하지 않은 채 허위 내용의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만을 송부하여 서울수서경찰서가 범죄 혐의 유무를 왜곡하는 수사 결과 발표문을 작성·배포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발인 13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증거 분석 결과물 회신을 거부하여 서울수서경찰서 수사팀의 정상적인 수사 진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발인 13 내지 17은 함께 공모하여 서울수서경찰청장 등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여 직권을 남용했고, 공무원임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IV. 결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발인 1 내지 17은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이익을 위하여 법률을 위반하였고, 국익과 민주주의를 훼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엄밀히 수사하여 중히 처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정원이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을 동원하여 대선에 개입한 것과 대선 시기 이 사건 대화록의 존재 및 내용을 새누리당 소속 의원 등에게 알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용인이, 최근 이 사건 대화록을 공개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승인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아직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법행위를 알고서 묵인 혹은 용인하였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고발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이 두 사람에게 대한 의혹도 배제하지 말고 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를 하여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ㄷ

시민고발단 법률대리인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시민고발단 의견 취합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지난 대선 때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검찰이 지난 6월1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선 직전 경찰도 이를 파악했지만 왜곡된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정원이나 경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국정원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 업무 전체를 선거 개입으로 왜곡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은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대선 때 우리는 덕 본 것은 없고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청와대는 오늘도 침묵하고 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가 6월20일 국정원의 정치 개입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장미꽃을 바구니에 꽂았다. 죽어버린 ‘민주주의의 꽃’(선거)을 되살리겠다는 뜻이지만 현실은 암흑시대다. <한겨레21>이 국가권력이 짓밟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그 9일간의 다큐멘터리를 기록한다. 얼은색 글씨는 검찰 수사 결과로 새로 드러난 사실이다.

● 2012년 12월11일

민주통합당 관계자가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요원(당시 28살·가명)씨 차량을 뒤쫓았다. 국정원 심리전단이 불법 정치활동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는데 김씨가 그중 한 명이라고 국정원 전직 직원 김아무개(50·불구속 거소)씨가 알려줬기 때문이다.

김요원씨는 서울 역삼동 S오피스텔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집 호수를 알 수 없던 민주당은 김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오피스텔 경비원을 통해 접촉사고를 알렸지만 김씨는 “그냥 놔두라”며 내려오지 않았다. 저녁 6시40분,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비방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저녁 7시27분, 김요원씨는 오피스텔에서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지난해 12월19일 저녁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뒤 서울 여의도에서 지지자들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경찰이 이를 은폐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음모와 협잡의 나날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앞 대차 국전루타 18대 대선일까지 ‘암흑의 9일’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이 거대한 사기극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복귀가 박근혜 엄청 두려워하는 듯ㅋㅋ’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하긴 당연하겠지. 누구 딸이냐. 북한이 오죽 박정희 싫어했으면 청와대로 특공대 파견했겠냐ㅋㅋ? 근해 정이면ㅋㅋㅋ 복귀는 괴멸할 거다.”

경찰 등이 김씨의 오피스텔 문을 두드렸다. 33㎡(10평) 규모의 방 안에는 데스크톱 컴퓨터 1대, 노트북 1대와 침대 등이 있었다. “국정원 직원이나”고 묻자 김씨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방을 둘러본 뒤 경찰이 나왔다.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증거로 확보해야 한다”고 민주당이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국정원은 김씨가 직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치 개입 활동은 부인했다. “직원 김씨가 오피스텔에서 정치 사안 댓글을 달았다는 민주당 쪽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국정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적 활동을 일절 한 적이 없다.”

하지만 국정원은 2010년 지방선거부터 지난해 대선까지 각종 선거에 개입했다. 원세훈(62) 국정원장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시민단체·노조 등을 모두 ‘중복 좌파’로 보고 공격 대상으로 삼으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그 지시에 따라 국정원 직원 70여 명이 포털 사이트 등 15곳에 쓴 게시물 5179건을 검찰이 찾아냈는데, 그중 1970건이 불법 정치 개입 글이었다. 이것도 국정원이 ‘실수로’ 지우지 못한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요원씨 사진) 이후 연발 연초에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ID 수백 개가 회원 탈퇴하고 삭제됐다”고 증거인멸 정황을 밝혔다. 다음 이고라의 경우 2012년 7월 이후 글이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이날 김요원씨도 오피스텔 문을 걸어잠그고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올렸던 게시물 ‘저는 이번에 박근혜 찍습니다’ 등을 삭제했다. “오래전 부(터) 한나라당 지지자였다. 이유는 한나라당 정책이 우리 집을 위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저희 가족은 압구정동에 아파트 두 채가 있다.”

※12월12일

오후 3시50분, 민주당은 김씨를 공직선거법(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및 국정원법(정치 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지난 3일간 하루 2~3시간밖에 (내곡동 청사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국정원이 개인별 노트북을 지급해 매일 주요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게재할 댓글 내용을 하달해왔으며 청사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도록 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은 검찰 수사 결과와 일치한다. 외부에서 일하는 사이버팀 요원은 각자 담당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며 글 게시, 추천·반대 클릭 등을 조직적으로 수행했다. 그 활동 결과는 최종적으로 원

세훈 국정원장에게 보고됐다.

그러나 김요원씨는 취재진과 통화할 때 “비방 댓글은 물론이고 대선과 관련한 어떤 글도 인터넷에 남긴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도 그렇게 주장했다. “민주당이 아무 근거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국정원을 끌어들이려 중상모략·마타도어(흑색선전)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저녁 7시, 김요원씨의 아버지(58)가 오피스텔에 찾아와 “인권유린”이라고 항의했다. 김씨도 “겁이 나서 나갈 수가 없다”며 “내 방이 마치 여론 조작을 하는 이지트처럼 표현되는 게 억울하다”고 했다.

경찰·선관위 직원이 밖에 있는데도 김씨는 또다시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 ‘경찰, 국정원 직원 이반주 내 소환… 강제 수사는 어려울 듯 (종합)’이라는 네이버 뉴스 기사였다. “이게 뭐냐. 젊은 처자 집 앞에 버티고 앉아서 부모가 와도 못 태러가게 하고 이걸 범죄 야담? 경찰은 왜 가만있었음?”(밤 11시11분) 본인 관련 기사에 다른 사람인 양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댓글은 계속 이어진다. “어딜 봐서 현행법임?”(11시4분) “증거 없이 고발하면 무고죄 되는 거 아닌가?”(11시7분) “죄 없음. 누가 와서 가방 열어서 한 열여주고 문도 열어줘야 하나요.”(11시13분) “부모가 와서 태러가려는데도 못 가게 했답니다.”(11시51분)

※12월13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도대체 선거가 무엇이고 권력이 무엇이기 때문에 급기야 한 여성을 가둬놓고 부모도 못 만나게 하는지 참담하다”며 “공당이 젊은 여성 한 명을 집단 테러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보기관마저 정쟁의 도구로 만들려고 했다면 좌시할 수 없는 문란 행위다.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밝혀지면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책임져야 한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이 제기한 것처럼 국정원이 여론 조작을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선거 공작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맞받아쳤다.

오전 11시 민주당은 김씨의 오피스텔 앞에서 철수하고, 오후 2시 13분 경찰이 들어갔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김씨는 거절했다. “난무하는 유언비어로 인권과 명예를 침해당해 결백을 입증하고 싶다”며 데스크톱 본체와 노트북만 임의 제출했다.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 당장 경찰에 출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씨의 컴퓨터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에 넘겨주고 삭제 파일 복구, 인터넷 접속 기록 확인, 저장 정보 검색 등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했다.

12월14일

오전 11시, 서울청은 국정원의 협조를 받아 김씨 노트북의 보안을 해제했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인력까지 10명을 투입해 저녁 7시20분부터 디지털 증거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40분 뒤 삭제됐던 메모장 문서 파일 ‘꽃쌌_뽕뽕.txt’를 복구했다. 커뮤니티 운영 방식과 어떻게 하면 베스트 게시물로 선정되는지 등을 설명한 글과 함께 30개의 ID와 닉네임이 쏟아졌다. 국정원 심리전단의 외부 조력자 이아무개씨의 이름과 주민번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내용의 ‘오빠 MB 스타일’ 동영상의 특정 인터넷 주소(URL), ‘이적단체 강제해산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서둘러주세요’라는 글 등도 적혀 있었다.

분석관들은 ID와 닉네임의 검색어를 활용해 그와 연계된 10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김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와 언론사 사이트 등에 이례적으로 수만 건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터넷상에서 IP 역추적을 회피하려 한 흔적도 나왔다.

12월15일

아이디·닉네임 40개를 검색어로 활용해 인터넷 커뮤니티를 뒤졌더니 이번에는 여야 정당 및 대선 후보에 관한 게시글이 넘쳐났다. 당시 상황은 디지털증거분석실 자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녹화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분석관1: 이 사람이 주로 활동한 사이트가 네이버, 다음, 오유(오늘의 유머), 투데이유머, 보배드림.

분석관2: 그러면 여러 명이 똑같은 ID로 번갈아가면서... 왜냐면

민주당합당은 지난해 12월11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국정원 여직원 김요원(가명)씨의 서울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밤새 대치했다. 김요원씨는 12월15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4시간30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12월17일 “김씨가 ID·닉네임 40여개를 사용했지만 정치 개입 댓글을 게시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거짓으로 발표했다(왼쪽부터).

IP 주소 바꿔야 될 것 아냐.

분석관1: 당연하지. 애가 업무적으로 안 했다면 그냥 웬만한 사이트는 잡다한 게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딱딱, 딱딱 몇 개 사이트만 반복되어서 이렇게 있는 게 업무 사항이야. (중략) 며칠 단위로 쓰기도 하고 계속해서 쓰기도 하고 10월달부터 계속 썼네요. 거의 안 빼고, 안 빼고 거의 사용했네. 하루 종일 사용했네.

분석관2: 하루 종일 한 2시부터 보네요.

김요원씨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4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온 저와 국정원을 왜 이렇게까지 선거에 개입시키려 하는지 정말 실망스럽다. 이번 사건으로 내 인생은 너무 황폐화됐다.”

증거분석 상황에 대한 보고는 김용관 서울청장이 직접 받았다. 다만 컴퓨터 기록이 남지 않도록 펜으로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김 청장은 결과물을 수서서에 그대로 넘겨주면 바로 수사해 국정원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날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수서서에 보내지 않고 국정원의 개입 의혹을 해소하는 내용의 왜곡 발표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김용관 공소장) 김 청장은 대구 출생으로, 박근혜 후보가 이사진을 지낸 영남대를 나왔다. 행정고시 합격 뒤 국정원에서 근무하다 경찰로 이직했다.

김 청장이 왜곡한 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하자 서울청은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와 인터넷 검색 자료를 모두 은폐하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초안을 준비했다.

12월16일

거짓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에 일부 분석관들이 서명을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다수의 ID와 닉네임이 발견됐고 그 ID와 닉네임으로 작성한 게시글도 남아 있었다’는 내용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묵살됐다. 분석관들이 분석 과정에서 확인한 선거·정



원거에 이종근



원거에 김용관 연합뉴스



국정원 대선 개입과 경찰 수사 왜곡 일지

치 관련 출력물이 100여 쪽에 이르렀지만 이날 밤 모두 폐기됐다.

김용판 서울청장은 이광석 수서서장에게 전화해 밤 11시에 중간 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먼저 언론에 배포하고 다음날 오전 9시에 기자회견을 하라고 했다. 대선 3차 TV토론회가 끝나자마자 A4용지 3장의 경찰 보도자료가 기자들에게 전달됐다. "13일 김씨로부터 받은 하드디스크의 삭제된 파일을 복원하고 인터넷 접속 기록과 문서 파일을 분석했다. 관련 게시물이나 댓글을 찾기 위해 수십 개의 검색어로 검색한 후 정밀 분석하기도 했다. 그 결과 김씨가 지난 10월1일부터 12월13일 사이 양당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물이나 댓글을 게시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11분 만에 국정원이 보도자료를 냈다. "국정원 직원 개인의 인권이 철저히 짓밟혔음은 물론이고 국정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 국가정보기관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될 것이다." 새누리당 박선규 대변인은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경찰 수사로 밝혀졌다. 민주당의 무모하고 위협스런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12월17일

오전 9시, 이광석 수서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김요원씨가 인터넷에서 사용한 ID·닉네임은 40여 개"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정보기관 직원 특성상 사이버 영역의 첩보를 수집하는 일이 많아 그 정도의 ID는 쓰고 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이 김씨의 오피스텔에 들이닥친 12월11일 이후 일부 파일이 삭제됐다고도 했다. 하지만 "김씨가 삭제한 파일을 복구했으나 비방 댓글과는 관련 없는 개인적인 내용이었다"고 경찰이 설명했다.

그러나 원세훈 원장의 공소장을 보면, 김씨는 2009년 2월14일~2012년 2월17일 '오늘의 유머' 등 사이트에 518차례, 다음 '아고라'에 1415차례, 다음 카페 '안티MBC'에 44차례 등 합계 1977회에 걸쳐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했다.

민주당은 "총체적 부실수사, 정치적 기획수사"라고 비판했다. 김용판 서울청장은 "분석 결과가 반대로 나와도 마찬가지로 즉시 발표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또 "추가 수사를 하려면 먼저 민주당에서 댓글의 내용 등 범죄 혐의를 특정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박근혜 후보는 충남·경기·인천 유세에서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은 증거 하나 내놓지 못하면서 국정원 못 믿겠다, 경찰도 못 믿겠다, 선관위도 못 믿겠다고 하면 도대체 누구를 믿는단 말이냐. 이런 구태 정치를 여러분의 투표로 끝내달라."

12월18일

이틀간 수서서 수사팀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물과 증거물을 달라고 서울청에 수차례 요구하고 공문까지 보냈다. '분석 결과 보고서에서 확인한 ID 및 닉네임 목록을 지체 없이 통보 바란다.' 하지만 서울청 수사과는 거부했다. 증거분석 상황을 알리지 말라는 김용판 서울청장의 지시 때문이었다.

저녁 7시35분, 수서서 수사팀이 직접 찾아와 분석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따지자 마지못해 김요원씨의 하드디스크에서 확인한 인터넷 접속 기록과 최근 3개월간 사용한 파일 내용 등을 전달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ID와 닉네임 40개는 빠뜨렸다. 이 사실을 알아챈 수서서가 다시 강력히 항의하자 자정이 넘은 0시38분 결과물을 CD에 담아 줬다. 이미 대통령 선거일이 었다.

2012년 12월11일(D-8)

민주당, 국정원 직원 김요원(28·가명)씨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밤샘 대치

12월12일

민주당, 선거법·국정원법 위반으로 고발

12월13일

수서서, 국정원 범죄 수사 개시
김씨 노트북과 데스크톱 임의 제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모략으로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 책임져야"

12월14일

11:00 서울청, 국정원 협조로 노트북 보안 해제
방 김씨의 메모장 txt 파일 발견, 국정원 정치 개입 단서

12월15일

4:00 인터넷 활동 ID·닉네임 30개 이상 발견, 국정원의 정치 개입 글 발견
오전 증거분석 상황 수기 보고
16:30 김씨 경찰 출석 "내 인생 너무 황폐화"
20:00 "박근혜 지지, 문재인 비방 글"이 노트북에서 나왔는지 한정해 분석하라고 지침 하달
서울청,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준비 시작
"댓글은 발견할 수 없었다"는 식으로 미리 정한 결과 맞춰 문구 초안 작성

12월16일

17:00 수서서, 경찰청 요구에 따라 기존 100개 키워드를 4개로 축소
20:00 경찰청, 보도자료 마무리
21:15 증거물 분석 작업 완료
22:00 대선후보 TV 3차 합동 토론 종료
22:37 서울청, 수서서에 디지털분석결과보고서 송부
23:00 수서서 수사 결과 발표(보도자료)
23:11 국정원 보도자료- '국정원 조직적 비방' 댓글' 주장은 사실무근

12월17일

09:00 수서서 서장, 중간 수사 결과 기자회견
오후 수서서, 서울청에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물 및 증거물 송부 요청

12월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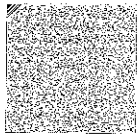
오전 수서서, 증거분석 송부 요청 지속 및 공문 발송
19:35 서울청, 1차 자료 수서서 인계

12월19일 대통령 선거일

0시38분 ID·닉네임 등 최종 증거분석 결과물 인계
박근혜 대통령 당선 "국민 여러분이 승리"

12월19일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108만 표 차로 누르고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 당선인은 "국민 여러분의 승리"라고 당선 소감에서 밝혔다. "선거 기간 중 저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신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 ㄱ



부활부활 국정원개색희야

국정원개색희야. (國政原開霽熙夜: 국정의 근원은 약한 곳을 열고 어두운 밤에 빛을 비추는 데 있는데)
서울 내곡동에 길가에 앉아 대화록을 깎아 파는 노인이 있었다. 한 편을 만들어보려고 흥정을 했다. 값을 굉장히 비싸게 부르는 것 같았다. “좀 싸게 해줄 수 없습니까?” 부탁을 했더니, “대화록 하나 갖고 예누리하겠소? 비싸거든 다른 데 가 사우.” 대단히 무뚝뚝한 노인이었다. 건설업자들 뒤를 봐주고 돈 뜯개나 만졌더니 과연, 싫었다. 값을 흥정하지도 못하고 잘 깎아나 달라고만 부탁했다.

포기말언장난해. (包記發言場亂駭: 기록을 포장하고 말을 짓밟아 세상을 어지럽고 놀랄게 만드네)
그는 잠자코 열심히 깎고 있었다. ‘국방위원장’을 ‘국방위원장님’으로, ‘나를’ ‘저’로 바꿨다. 내가 보기엔

그만하면 다 됐는데, 날이 저물도록 낱말을 이리 꺾고 저리 맞추며 자꾸만 더 깎고 있었다. 인제 다 됐으니 그냥 달라고 해도 통 못 들은 척 대꾸가 없다. 대선 투표일이 빠듯해왔다. 갑갑하고 지루하고 초조할 지경이었다. “더 깎지 않아도 좋으니 그냥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화를 버럭 내며 “잘 깎아야 색깔론이 되지, 없는 포기 발언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한다. 나도 기가 막혀 “살 사람이 좋다는데 무얼 더 깎는다는 말이요? 노인장, 외고집이시구먼.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가면 되고...” 했더니 “다른 데 가서 사우. 난 안 팔겠소” 하고 내뱉는다.

명박근해한총속. (名拍根寒旱痛縮: 그릇을 쳐 깨뜨리고 뿌리를 상하게 하여 가뭄의 고통이 이어지네)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갈 수도 없고,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마음대로 깎아보시오.” “글쎄, 재촉을 하면 점점 거칠고 늦어진다니까, 색깔론이란 제대로 만들어야지, 깎다가 놓치면 되나.” 좀 누그러진 말씨다. 얼마 뒤 대화록을 들고 이리저리 들춰보더니 다 됐다고 내준다. 사실 다 되기는 아까부터 다 돼 있던 대화록이다. 나는 불

쾌하기 짝이 없었다. 그런데 캠프에 와서 대화록을 내놔더니 다들 예쁘게 잘 깎았다고 야단이다. 풍문으로 나돌던 소문보다 참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전의 것이나 별로 다른 것 같지가 않았다. 무엇보다 ‘포기’ 발언이 없다는 게 마음에 걸렸다.

오년내래입덕. (五年奈來來隱德: 나라에 덕이 임하기까지 5년을 여찌 기다릴꼬)

하지만 지도부의 설명을 들어보니, 대화록이 너무 자세하면 독해가 어려워 보수 표심이 결집하지 않으며, 너무 간단하면 오히려 의심을 사기 쉽다. ‘형님’ 중 한 분은 비가 오는 장터에서 대화록을 꺼내놓고 눈물을 뿌리며 열변을 토했다. 나는 비로소 마음이 확 풀렸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내 태도를 뉘우쳤다. 참으로 미안했다. 노인을 찾아가 추방에 탁주라도 대접하며 진심으로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앉았던 내곡동 길거리로 노인은 있지 아니했다. 어디 PC방을 전전하며 댓글이나 달고 있을까. 허전하고 서운했다. 여의도에 돌아갔더니 요새는 색깔론질 하는 소리도 들을 수가 없다. 대차게 뻘룩이 났기 때문일 것이다. 문득 지난 대선에서 대화록을 깎던 노인의 모습이 떠오른다.

송호균 기자 uknow@hani.co.kr



한겨레 신수영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한겨레21〉 홈페이지(han21.hani.co.kr), 인터넷서점(에스24, 인터파크, 알라딘, 반디앤루니스에서 한겨레21 정기구독 검색), 전화 1566-9595
지사 미디어마켓 02-2013-1300, 강남 02-597-0021, 한빛 02-3272-5454, 메가진 02-776-0021, 인천 032-466-0211, 부산 대구 051-816-2100, 대전 042-224-2121, 광주 062-381-0005, 전주 063-271-7373, 제주 064-724-1121 구독료 1년 15만원, 2년 27만원, 3년 39만원

독자
여러분,
함께해요!

독자 인터뷰 창간 독자부터 어쩌다 한 번 읽은 독자까지 모두 환영합니다.
독자참여방 blog.hani.co.kr/han21dokka/ 이메일 han21@hani.co.kr
트위터 @han21_editor 페이스북 facebook.com/hankyoreh21
우편 (우)121-75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6-25 한겨레신문사 〈한겨레21〉 독자와 함께 담당자 앞

